

19일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 '전두환 5·18기획설' 다시 주목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① 집단 발포전 헬기 대기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7일 5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의 조사결과와 광주일보가 입수한 5월 관련 문건을 토대로 헬기사격, 신군부의 5월 역사왜곡 등 5·18의 감춰진 진실을 재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는 발표를 의미하는 자위권 보유 전명(1980년 5월21일 오후 7시30분) 이전부터 광주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하루 만에 광주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를 배치하고 운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헬기무장은 지상군에게 사격명령이나 다른 실탄분배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미 신군

자위권 보유 전명 이전부터

광주시민들 향해 사격 준비

“시위대 제압위해 해남 출동”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증언도

부가 무력진압을 준비했다는 방증이다.

최근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회고록 등을 통해 자위권 발동 전 광주에 무장헬기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지난 38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한꺼풀 벗겨졌다.

8일 배포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1980년 5월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한 500MD 헬기 3대가 배치됐다. 특조위가 발공한 1988년 '511연구위원회'의 내부 검토자료 '31사단 관계관 간담회'에 담긴 내용이다.

'1980년 항공병과사'에 따르면 육군 31항공단 505·506 항공대는 5월15일부터 광주에 500MD 2대를 배치, 운용하고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31사단에 배치된 헬기 조종사였던 506항공대 작전과장 최모 소령은 “폭도를 제압하기 위해 해남으로 출동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특조위에 증언하기도 했다. 최 소령이 조종한 헬기는 무장한 헬기 3대 가운데 하나다.

또 특조위가 조사한 502·505·506항공대 공격헬기부대 조종사들은 5월21일 오전 6시 광주에 출동할 때부터 무장을 하고 간 사실을 인정했다.

이중 일부 조종사는 탄약 장착 사실을 시인했다.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은 지난 1995년 검찰에서 “실탄 지급은 곧 발포명령이자 자위권 발동”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미뤄 헬기에 사격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다른 조종사들은 시위진압을 위한 출동일 뿐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5월21일 이전에 헬기무장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다른 자료도 발굴됐다.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의 '각 단계별 작전병력 및 장비'란 2단계(5월18~21일) 구간에는 'UH-1H 11대와 500MD 7대가 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UH-1H의 무장여부는 나와있지 않으나 문서에 기재된 500MD는 미니건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 문서. 특조위는 자료 62만쪽을 수집, 분석하고 관련자 120명 면담을 통해 광주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별건 기관포)을 기본화기로 장착하는 공격용 헬기다. 같은 문서 '항공작전지원'란에는 헬기 지원기간을 1980년 5월21일~29일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임무는 '무력시위 및 의명(依命) 공중화력지원'이다.

당시 황영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은 김기석 전교사령관 부사령관에게 5월20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코브라로 APC(장갑차),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구두명령을 했다. 자위권 발동 이전 무장헬기를 대기시키고 사격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김기석 부사령관은 명령을 메모해 남겨두고 1995년도에 검찰 수사 때 제출했다. 한 특조위원은 "5월19일부터 31사단에

헬기가 배치됐다는 사실은 특조위 조사를 통해 처음 밝혀진 것으로, '무장헬기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신군부의 주장을 뒤엎는 내용이다"며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주석 국방차관 ‘5·18 은폐’ 511연구위 활동 밝혀야”

기념재단 등 5·18단체 촉구

광주 5월 단체가 5·18 왜곡을 주도했던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서주석 국방부 차관(광주일보 2월8일자 3면)에게 활동내용 등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차관이 5·18왜곡을 주도했던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유감”이라고 밝혔다.

5·18재단 등은 “오월단체는 현 정부가 5·18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밝혔고 이에 화답해 활동한 국방부의 전향적

태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그러나 국방부 차관은 5·18 진실규명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인 만큼 국방부 차관의 5·18 왜곡 주도기관 참여 전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 차관은 511연구위원회에서의 본인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낱말이 밝혀야 하고, 국방부 5·18특조위는 511연구위원회 관련 조사에서 누구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헬기사격 없다’던 전두환 주장 허위사실 규명

검찰, 5·18특조위 자료 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 자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5·18특조위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계엄사령부 지침, 무장헬기 대기 사실 등을 근거로 5·18 당시 군 헬기 사

격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헬기사격 여부를 조사하는 검찰은 그동안 조사 결과와 특조위 자료를 토대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조비오 신부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허위 주장을 한다고 비난해 조 신부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와 특조위 발표가 많은 부분이 중첩되지만 특조위 자료를 참고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7명 사망’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병원장 등 3명 체포

안전관리 의무 소홀 혐의

경찰이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난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 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7일 오후 3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탈출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각자 맡은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 등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가장 구직광고 말려들면 범죄자 된다

광주동부경찰, 통장으로 피해자 돈받아 전달 20대 구속영장 신청

광주동부경찰은 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혐의(사기)로 이모(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 이씨에게 전달한 인출책 김모(여·45)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낮

12시에 광주시 동구 한 은행에서 김씨로부터 2차례 현금 395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한 금융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대전·강릉·포항·구미 등 전국 각지에서 30여회에 걸쳐 4억1000여

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꾀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돈이 필요했던 김씨는 지난 1월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대부분 체에 전화, 범행에 연루됐다. 김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해 통장에 900만원을

입금할 테니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대부업체 관계자 말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이씨에게 돈을 전달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한 대부업체의 구직공고를 보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SNS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1000만원을 입금하고 수당 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00여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중 전 여친 사기미수 일부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기수검 배우 김현중(32)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가운데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

○법원은 최씨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이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되나, 최씨가 김씨와 교제하는 동안 두 차례 임신했다가 유산 또는 중절을 겪었고 김씨의 여자 문제로 다툰 것 등 최씨 사생활에도 비난 여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구례, 그랜드 호텔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11-2
- 지리산온천 정문 바로 앞, 최고위치
- 대지489평, 건물 768평, 대형객실 40개
- 지하1 지상4층, 엘리베이터 유
- 식당(300명 수용), 커피숍, 단란주점/세미나실
- 케이블카 설치 최우선 지역
- 연 매출 8~10억/순수익 4억~5억 가능
- 감정가 / 시세 - 25억
- 매매 - 20억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2월 중순 입주가능
- 시세 - 1억
-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H.010-3605-5000